

한 총리, “사는 곳은 달라도, 통합돌봄의 빈틈이 없도록 지원 강화할 것”

- 통합돌봄 현장간담회 개최 및 서비스 이용가정, 치매 안심센터 방문
- 공공 돌봄센터 신설 등 지역 간 통합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서비스 안내·홍보 강화 당부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6일(금) 오후 대전 서구를 방문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돌봄서비스 이용 어르신과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이번 방문은 올해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이후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한 총리는 통합돌봄 현장간담회에서 통합돌봄 시행 약 반년 만에 약 7만 8천명에게 인당 평균 3.5개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 여전히 개선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며,
 - “내년부터 돌봄 취약지역에 공공 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제1차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통합돌봄의 확산은 사회연대경제로서 지역 일자리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 중인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도 돌아보겠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민간·지역 봉사단체 등 사회적 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내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 통합돌봄 이용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이후 달라진 점과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고,
 -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세심한 지원을 당부하였다.
- 이후 대전 동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치매 조기검진 등 치매 예방·관리사업의 운영현황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한 총리는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한 총리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국민이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해줄 것”을 복지부와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한동희 (044-200-2287)
		담당자	사무관	최현조 (044-200-2312)